

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2000-01



남북한 화해 ·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 독일통일 10주년 기념 한 · 독 워크숍 -

통일연구원

목 차

- ◇ 발 간 사
곽태환(통일연구원 원장)

- ◇ 동독탈주자 및 이주자를 위한 「긴급구호소」 방문 1
베를린 마리안펠데(Marienfelde)

- ◇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여성 NGOs의 역할 14
슈미트 국장(Gertraude Schmidt)

- ◇ 서독의 교육이 동서독 화해·협력에 미친 영향 25
각 국장(Hans-Jürgen Kaack)·마레츠키 교수(Maretski)

- ◇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본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34
알브레흐트 교수(Ulrich Albrecht)

- ◇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44
자우어 국장(Johannes Sauer)

- ◇ 남북한 화해·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52
멥겔교수(H. J. Mengel)·프리스니츠 전 차관(Walter Priesnitz)

- ◇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본 NGOs의 역할 57
쇼어렘머 목사(Friedrich Schorlemmer)

◇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 평가	66
프리스니츠 전 차관(Walter Priesnitz)	
◇ 시 사 접	75
◇ 수집 및 참고자료	106
◇ 워크샵 일정표	111

발 간 사

본 책자는 인문사회연구회의 2000년 협동연구사업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독일에서 개최된 「한·독 워크샵」의 결과보고서로 발간된 것입니다.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민족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금년 연구사업으로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통일연구원은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9개 국책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독 워크샵」은 독일 통일 10주년을 맞아 통일독일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정착의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구체화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독이 통일 이전에 동독에 대하여 추진하였던 화해·협력정책을 연구 분석하여 향후 우리가 남북한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는데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이번 워크샵의 크나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8박 9일의 짧은 일정동안 ‘통일 이전 동서독 화해·협력의 문제점’ 등 10개 주제의 회의를 개최하며 정치, 법률, 여성, 교육, 비정부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참가 연구진들의 강행군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성과와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분야별 10명의 전문연구진이 독일통일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분석한 것으로써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실천적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과 더불어 이번 「한·독 워크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인문사회연구회 김영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독일현지에서 본 워크샵의 일정과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 독일 한국대사관의 이기주 대사님, 강태성 공사님, 이현표 문화홍보원장님, 김홍규 영사님, 그리고 본 워크샵을 처음부터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주 독일 한국문화홍보원의 한우창 박사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의 발간이 독일 통일 경험에 대한 연구 분석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정책방안 제시의 유용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값진 성과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0. 9.

곽 태 환 통일연구원 원장

동독탈주자 및 이주자를 위한 「긴급구조소」 방문 : 베를린 마리안펠데(Marienfelde)

베를린의 마리엔펠데에 위치한 긴급구조소인 이곳은 현재 구 소련과 러시아에서 온 독일계통 독일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3000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 곳은 한 때 6000명까지 수용하였으며, 현재는 65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전시구역만 안내할 수 있고 다른 구역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곳의 역사, 역할 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 이곳에서 직업교육이나 사회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급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전에 직장을 가졌더라면 노동청에서 급여를 받고, 연금자일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연금도 없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젊은 사람일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Q) 이 시설 자체 내에 직업교육은 없습니까?

A) 예, 없습니다.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이전에는 소련에서 온 독일 계통 난민들에게 독일어 강좌를 위한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소련에서 살다가 귀국의사를 밝히고 독일로 오는 독일계 사람들은 소련에서 절차를 마치고 비자를 받아 독일로 오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면 일단 1차 구호소에 다 집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분포량에 따라 각 연방주에 분산 배치되는데, 베를린으로 지정된 사람은 일단 이곳에 오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그전에 동독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었을 당시 여기에는 하루에 2,600여명이 도착을 했고, 그전에 더 많은 사람이 오긴 했지만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동독사람을 수용한 것은 1953년 4월 14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이 곳을 운영하는 기관이 1953년부터 계속 동일한 기관이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며 급여, 식품의 배부는 항상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는 그 외에 국내기관, 국제기관, 사립학교 같은 복지기관, 첩보기관도 여기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었고 베를린은 동독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전승4개국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지도가 보여주는 이 선은 옛날 베를린을 갈랐던 국경선인데 시의 구중심부는 소련지역이고, 그 외 프랑크지역, 영국지역, 미국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구호소는 미군 점령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교통수단은 그대로 운행되었고, 따라서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길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에 있는 작은 도시 포츠담에서 동베를린으로 가려면 서베를린을 통해서 가야 간편하지 다른 길을 택하면 만나절이나 걸려 돌아갈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지나면서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를린 내에서 접경지, 국경 같은 것은 거리의 바닥에 하얀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탈주자의 수는 베를린이 가장 많았는데 1953에서 1962년 사이에 탈주자의 100%가 베를린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베를린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사실은 곧 여기 이 시설이 있는 마리안펠데에 도착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탈주자의 경우 보통 걸친 옷만 입은 채로 왔기 때문에 일단 도착하면 지급해야 할 품목이 많았습니다. 식료품, 주거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품이 배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독연방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주자는 이 곳에 도착한 후 넘어오는 과정, 즉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상황과 근거를 확실히 말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다른 신체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다는 근거 등입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1953년 단 한 달만에 4만 9천명의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숫자 자체가 정치적 신호역할을 하여 1953년 4월 14일 당시 서독 대통령의 지시로 이곳 마리안펠데의 구호소가 건립되었습니다.

동·서독을 갈라놓는 체제(사회주의, 시장경제주의)는 베를린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냉전 중 베를린이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건립 당시 서류가 하나 있는데 두 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양 체제가 서로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베를린과 연방정부는 이 시설을 건립하여 자유가 없는 곳에서 점점 많이 넘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모든 독일인의 자유와 통일을 위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베를린은 이 구호소를 주거지로 건립함으로써 차후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방이 3개 있는 아파트만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동독이 곧 무너질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 이후에 일반 주거 아파트로 사용할

4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행정적 시설로 건립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까지 행정적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마다 목욕탕과 부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입구가 바로 동독 난민들이 들어오는 입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양철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 앞의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동독인 이었지만 나가는 사람은 서독인 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독시민을 서독시민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은 1급비밀 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어떤 거리에 누가 사는지, 그 주민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알았고, 회사원의 목록도 가지고 있었으며, 정당원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와 아울러 누가 첩보원인지를 가려 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특히 군(軍) 주둔지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고학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런 이곳 외에 본부라든가 아파트 같은 곳 등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여 일단 서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절차는 마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마친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데 서독에서 안 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서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Q) 1980년대 후반에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까?

A) 그렇습니다. 대개 기본절차는 비슷했는데 1961년부터 넘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때 넘어 온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급여 같은 것이 조금 풍족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시 초기단계의 얘기를 지속하면 이상의 절차를 마친 다음에 옷이

나, 속옷,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지였습니다. 도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수용할 수 없었고 베를린 지역의 여러 곳에 나눠서 수용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독일적십자사 같은 복지기관에서 일정의 시설을 사서 시설과 사람들을 제공하여 이들을 수용하고 그 이후 베를린 시로부터 급여를 대신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를 내거나 친구, 친척집에서 주거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통사람들은 보시다시피 건초더미 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구호소 내에 있던 사람들은 커다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내에서는 10명 내지 20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식당에서 다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탁아시설이 있었으며,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향을 버리고 떠나 온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단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런 기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복지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보호소 내에서도 있었지만 보호소 밖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적십자사 같은 기관입니다. 주거가 확정이 되면 사람들은 경찰서나 동사무소 같은데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 주거지역에 따른 구가 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학교는 구에 따라 결정이 되고, 실직급여라든가 사회보장급여, 연금급여는 주거지역에 따른 구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체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독의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생활문제에 도움을 주는 센터가 있었는데, 이곳 마리아넬데 보호소 내에는 노동청, 연금청, 의료보협기관의 대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벽이 설치된 이후의 얘기지만 베를린 시에서 보조기관이 하나 있

었는데 그 사람들은 동독사람들에게 서독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이뤄진 적응을 위한 도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연금청의 대표들은 자문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과 같은 직접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 동독주민은 동독을 탈주한 이유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먼저 [예비검토 A]에서 동독탈주 이유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후 [예비검토 B]를 통해 다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B검토의 주관기관은 연방헌법보호기관, 연방첩보기관, 연방보안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여러 기관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무소의 사람들이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난민들에 대한 프로필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Q) 동독에서 받은 기술자격증이나 학위는 서독에서 인정되었습니까?

A) 대부분은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서독은 고학력의 인력을 낮은 임금에 채용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을 받아야 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재교육은 대개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1차보호기관에서 약 30분에 걸쳐 이 난민이 서독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1961년까지 만의 절차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동독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근거를 대면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탈주자들은 자기의 상황을 보다 과장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61년까지만 해도 정치적 이유로 탈주한 사람은 10%에 불과하고, 약 30%는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약 50%는 경제적 이유로 탈주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검토위원들은 정치적 탈주자, 친척을 찾아온 사람, 고용계약서

를 가지고 온 사람, 주거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비자를 꼭 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비자가 거부되었는데 50년대까지는 탈주한 사람의 50% 이상이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동독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에 결정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꼭 비자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줄 수도 있다는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 가운데 이곳의 지원을 받고 동독으로 돌아가 활동할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탄로가 날 경우 처벌이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보안기관과 관련한 사람들이 동독 공장에서 일했는데 비밀활동을 해서 숫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민구호소와 그 관련 기관 자체가 동독의 비밀경찰인 스타지의 침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난민의 서류를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 기관들이 스타지의 침투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동독은 난민들 중 누가 서독으로 넘어갔는지, 이 사람들이 동독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들이나 독일연방정보국에서는 이런 스타지의 침투를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립기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때 여기 마리안펠데 구호소의 소장도 스타지 사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Q) 가족 단위의 탈주자에 대한 가족 단위의 적응 훈련은 없었습니까?

A) 보통 난민들이 베를린에 도착하면, 연방주별로 퍼센트에 따라 배정된 후 비행기로 서독의 각 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연방주 구호소에 도착한 다음 다시 기관에 보내져 준비된 시설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난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치난민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 가장 많은 적응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가 제공되고(무료가 아니라 소개되는 것), 직장이 보장되며, 아울러 가구, 옷 등을 사기 위한 돈을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일 경우나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 특별프로그램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일 경우 정치난민으로 인정된 농민이나 사업가는 이자율이 낮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대출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나중에 연금을 타기 위한 연금의 연수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감봉된 횟수를 연금연수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친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생활을 했고 정치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생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단 이후 서독지역은 급격히 미국화 되었고 동독은 소련화(사회주의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가 몇 년만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50년대에 탈주한 사람들마저도 서독의 체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차이점은 동독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하는데 비하여 서독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본인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마리안펠데 구호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새로운 체제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교육이 서독 사람들보다 더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독 사람의 서독 적응 과정에서 완전한 적응이 이루어진 시점이라 판단되는 시기는 탈주자가 새로운 고향을 찾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된 다음에 직장을 얻고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한 시점입니다. 이런 새 출발의 변화는 커다란 것이었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는 서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50 - 60년대에 도 그랬지만 장벽이 무너진 90년대에 도 걸인이거나 사회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구 동독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50 - 60년대에 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14살 된 청소년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체제가 반대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인해 동독의 경우 여성은 노동인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서독은 주부의 입장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서독에 적응하는 것이 커다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서독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동독으로 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또 다시 서독으로 왔다가 동독으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정도 되었습니다.

70 - 90년대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그 중에서 합법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독의 스타지에 이유를 대고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고학력자로 의사 등 화이트칼라인데 이들은 일할 의사가 뚜렷했기 때문에 서독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서독의 고용주들은 동독 사람들을 선호적으로 채용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만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대형 구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만 지급되는 사회보장만을 받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년대까지만 해도 베를린에 20만 명 정도 살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호소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적응이 어려워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정치,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에게 비자를 줄 수도 있다는 법적인 권한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55년 당시 50%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60년대에는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때 비자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20만명)은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서독으

로 보내지게 되는 과정에서 서독의 연방주마다 얼마의 비율로 보내진다는 분포도가 있었으며 주마다 베를린에 하나의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정은 주의 크기, 주민의 수, 최근에는 세금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만약에 어떤 주에 친척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는데 이는 적응도 쉽고 돈도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Q) 이곳의 한달 방문객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한달 100명 정도 방문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며, 공식적인 재정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여론조사팀으로부터 이곳이 전체 독일을 위한 기념 장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손님중의 많은 분들은 옛날 동독의 난민들로서 탈주한 뒤에 탈주의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려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Q) 특별기를 통해 서독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그것은 기차나 차를 타고 동독을 지나 서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동독 측에 의한 여권심사를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난민이 여권심사에서 걸려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지 않고 여권심사 없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밖에 없습니다. 특별기를 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50년대 마리안펠데 구호소입니다. 이 사진은 매우 귀한 것인데 이는 그 당시 연합군만이 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곳에는 연합군이 있었는데 1층에는 미군, 2층에는 영국군, 나머지는 프랑스군이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행정부처와 의료기관은 물론 경찰과 감옥도 있었습니다. 독일연방정부가 차지한 건

물 내에서 [예비 검토 A, B]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식당과 빨래방,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곳은 말하자면 도시내의 도시였습니다.

1949년부터 61년까지 난민 숫자의 분포도는 독일 역사의 한 측정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독이나 동독 아니면 외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위급할 경우 동독탈주자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동독에서 배급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도 탈주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탈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시 동독의 상황이 감옥과 같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 탈주한 한 화가가 그려서 기증한 이 그림이 이를 보여줍니다.

1963년 이후에는 동독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독일인들도 이 구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이는 베를린에서만은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나는 독일계 사람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1970 - 80년대에는 대부분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동독에서 이런 신청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청을 한 사람은 동독에서 많은 억압을 받았는데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애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는 직장을 잃고 친구들이나 이웃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신청이 수락될 경우도 있고 단식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서류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청에 가서 구두로 단지 “나는 동독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스타지의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표현한 뒤 정말로 출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통고를 받으며, 그 때서야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구두신청을 한 다음에는 출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고 짐을 꾸린 채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10 - 20년이 될 수도 있고 이틀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타지의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곳에 와서 심리적 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989년에 헝가리 국경이 열리면서 동독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연방주인 바이렌주으로 넘어왔고, 주배정에 따라 베를린으로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 동독을 출국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오랜 기간동안 억압을 받다가 동독을 탈주해 서독에 온 사람과 헝가리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그냥 넘어온 사람이 여기에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두 그룹간에는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거주지를 격리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지며 넘어온 사람들도 거의 초췌한 상태였는데 이들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시키면 곤란하여 베를린의 한 시설에 따로 관리, 수용하였습니다. 1990년 3월18일 서독과의 통일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자유선거가 동독에서 실시된 후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Q) 동독비밀경찰 스타지의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스타지는 이 구호소를 마주보는 곳에 아파트를 구해 이 곳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스타지는 마리안펠데 구호소의 전직원에 대해 따로 파일을 하나 작성하고 차량번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스타지가 찍은 것이며, 스타지가 작성한 이 서류들을 보면 이 곳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차량번호마다, 행정직원 한 사람마다 스타지가 담당자를 선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지 에서는 첩보원을 탈주자로 위장시켜서 이곳으로 침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중 동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곳 행정직원의 몽타주 작성이나 건물 내부지도를 만드는데 협조하였습니다.

Q) 구호소의 긍정적 측면(성공 요인)과 부정적 측면(실패 요인)은 무

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구호소의 역할을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구호소는 커다란 정치적 의지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난민에게 서독사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활동했던 각 기관들도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리안펠데 보호소에 온 모든 난민들은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적 의지에서 와서 자율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강요나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여성 NGOs의 역할

슈미트 국장(Gertraude Schmidt)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청)

여러분을 환영하며 한국이 동서독 통일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동안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정치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문하신 곳은 연방정부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청”으로서 이곳은 가족부, 노인부, 여성부, 청소년부, 일반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는 6개에서 10개의 전문과정 분야와 담당전문가들이 있고 저는 여성부에서 남녀평등분야의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부에서는 부처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도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양육 및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를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부(父) 또는 모(母) 한 사람이 3년간 얻을 수 있는데 동 기간동안에는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와 모가 다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의 휴직사용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이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청소

년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특별히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NG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부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는 아시다시피 직원채용이나 급여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은 특별히 기존의 법조항이 여성참여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검토하여 여성참여증진과 여성권리신장을 위한 법개정을 건의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기관이나 여성연구가와의 협동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회의나 미팅을 주관합니다. 또한 여성부의 중요한 역할은 여성과 직장/직업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서독의 여성 NGO가 동서독 화해·협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자 합니다.

A) 저는 남녀평등분야에서 헌법의 기본원칙을 연구하고 있는데 서독의 여성 NGO활동보다는 동독인으로서 동독의 입장에서 동서독 화해 문제에 관해 해 드릴 말이 많습니다.

먼저 서독과 동독의 여성민간교류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인 통일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 당시 동베를린과 동독에서는 교회 내 여성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 변화·대화를 위한 여성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은 내면적으로는 반정부적 세력들이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목적들을 표방한 여성단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여성단체로 ‘독일민주여성단체’(DFD)가 있었으며 이 여성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단장이라고도 합니다. DFD는 통일과정과 통일 된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Q) 단계별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A) 1단계로서 준비과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제한적이었고 집중적인 시기는 80년대 후반인 86년에서 87년입니다. 통일준비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와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데모와 경찰들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 단체에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역할과 참여가 컸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통일찬반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문제는 중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이들 단체의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이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여성들이 단체내의 지도부가 남성들로만 구성되고 이들 지도부 남성들이 여성문제는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 때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이들 여성들은 다른 단체들에서 빠져 나온 여성들과 연합하여 여성 NGO를 결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UFV라는 독립여성단체 (총여성단체)가 되었습니다. UFV는 다양한 여성단체의 연합체였는데 한 예로 이 단체의 임원 중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임원은 인민극장을 대여하여 14일만에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인민극장의 2000개 좌석 수가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UFV에의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양한 여성단체의 연합체로서 특성을 가진 이 UFV는 각 참가자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1000명이 참가하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컸지만 선거 이후에는 서로 분리되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말하자면 89년 12월까지를 계기로 그 이후 역할과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독립여성단체에 여성당원도 있었는데 여성당원들은 대중적인 기본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단체들이 빠져 나옴으로써 현존하고 있지만 총여성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많은 여성 NGO들이 생겼는데 근래에 10주년을 맞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2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던 단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동독에서 폭력남편으로부터 도피처를 제공하는 시설인 ‘여성의 집’ 건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말씀해 주심으로 동독 여성단체의 역사적 기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여성단체들의 자율성 정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독에서 통일 후 여성단체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일 후보다는 통일 이전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이때 서독의 여성단체와 교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통일 후 정부프로그램으로 동독 내 여성단체에 막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액수는 몇백만 마르크에 달했었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율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성단체가 자치적으로 결성되었어도 외부적으로 그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회주의통치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독교 행사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많이 토론했다고 봅니다.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환경 및 평화주제를 가지고 여성신학자들이나 기독교여성단체들이 서로 공동행사를 주최하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토론했고 비밀리에 동독 내에서만 행해졌습니다.

기독교여성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환경사업을 표명하면서 베를린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여성단체를 통해 서독여성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단체들과 접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청소년단체가 있었는데 이러한 청소년단체들간의 교류가 있었으며 동서독간의 방문과 교류는 주로 베를린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의 여성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동독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관광이

나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와서 함께 모여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사람들이 올 때 동독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인쇄물이나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동독에서의 서독방문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항상 서독단체가 동독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여성단체들이 동독을 방문할 때 신생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들 단체와의 접촉은 우선적으로 가정에 숙박하는 등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였습니다. 모든 접촉과 모임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서독단체들은 동독시민들의 의식 및 조직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워크샵을 개최할 때 발표할 사람이 서독에서 와서 발표하고 가거나 저 자신은 조직화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사실 동독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독에서 강사들이 와서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서독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 서독인의 동독방문은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했습니까?

A) 전반적으로 80년대 말에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50회 생일이나 100회 생일 등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위한 기회마련의 길은 다양했고 열려 있었습니다.

Q)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서독인 들이 많은 행사를 만들면 동독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독이 얼마만큼 수용하였습니까?

A) 비교적 자유스러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78년부터 관광목적 방문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대개는 학생단체간의 방문이었습니다. 그

러나 조건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다가 0시까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 어떻게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의 경험이 궁금하였는데 동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에서 여성단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통일 이후 동서독 여성들이 평화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통일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A)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는 통일이전에 있었는데 서독여성들이 방문하는 단체들에서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공동협의체가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Q) 동독단체의 여성들은 서독의 여성들이 어떠한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까?

A) 무엇보다 상황을 알아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획득수단으로 각종 인쇄물이나 자료를 우선적으로 원했으며 접촉자체를 통한 토론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회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회의 때 배포된 발표자료나 팜플렛을 서독여성이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쉬운 것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인쇄물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 책자나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밑수의 형식으로 동독으로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인쇄물이나 자료를 받으면 동독여성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확산했습니까?

A) 인쇄물 배포는 동독 내에서는 불법이므로 대개는 구식복사기를 통해서 복사하여 돌려보았습니다. 한 사람 당 이틀정도 시간제한을 두어 책이나 자료를 본 후 페이퍼로 제출하여 돌려봄으로써 정보접촉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복사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등록 단체는 정부기관 여성단체인 DFD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Q) 등록된 여성단체는 하나만 있었습니까?

A) 독일에서 등록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다른데 등록된 것은 잘 모르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단체는 DFD 하나뿐입니다. DFD는 임원들의 회비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행사개최 비용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Q)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을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것으로 질문을 이해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서로간의 정보교환이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입니다. 이는 쌍방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통일 후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서독여성과 동독여성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서로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즉 서독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보면 서독여성들에게는 직업, 탁아, 성적 자유를 주요 사업과제로 삼았던 반면 동독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실천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독여성의 경우는 여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반면 서독은 그렇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요구가 다른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호간

의 대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동독에서는 여성해방이 이루어졌고 차별주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이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달성하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층에서는 거의 여성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 층에서는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여성차별은 동서독 여성들의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단체는 인가된 것이었습니까?

A) 평화를 위한 여성단체는 사실상 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여성단체로 이는 인가된 단체가 아니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여성단체에서 동독을 대표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Q) 국제여성단체와 서독의 여성단체가 교류를 시도할 경우 동독의 지원정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국제여성단체들과의 교류는 서독과 동독의 직접적인 교류보다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주변국 관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제적인 교류는 정식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한 공식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독정부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독 내에서 서독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많았지만 교류의 한계가 있었으며 국제적인 교류라 하더라도 DFD 같은 정부기관여성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동서독여성단체간 접근은 가능했지만 (예를 들면 체코 같은 제 3국에서의 만남)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Q) 국제회의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A) 저는 교류에 참가한 적이 없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중심적인 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직업, 탁아, 또는 생활필수품조달 같은 현실적 문제를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있었는데 여성분야는 어떠했습니까?

A)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독은 하나의 중앙 체제였기 때문에 공식적 여성단체 외에는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Q) 서독정부에서 NGO가 동독에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가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렇습니다. 서독정부는 통일이전과 통일과정에 가급적으로 많은 NGO를 지원하였고 특히 서독 NGO가 동독의 단체 및 여성을 접촉하는데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Q) 그러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A) 시사적인 것만 있습니다. 관련 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책자는 마지막 동독정부의 여성평등에 관한 것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Q) 서독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독 내에서 여성단체들간의 자체네트워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A) 통일이전 서독정부가 동독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은 책, 인쇄물의 형태, 여행경비 (서독여성단체가 동독으로 갈 수 있는 여행경

비), 그리고 과일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오는 형태들이었습니다. 동독의 여성단체들은 통일이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통일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통일 후 서독정부는 이러한 여성단체네트워크에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은 경우는 동독여성단체 세 기관과 서독여성단체 두 기관이 함께 공동행사를 할 때이며 행사의 주제는 여성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Q)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서독 여성 직업문제를 언급하셨는데 통일이전 동독에 계실 때 여성의 교류협력 중에 동독여성의 직업기술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교류가 있었습니까?

A) 없었습니다.

Q) 비공식적으로도 없었습니까?

A) 저 개인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조직화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Q) 그럼 남성을 포함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있었습니까?

A) 서독정부의 지원은 없었으며 개인이 받았던 것도 서독의 기독교 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직업기술교육은 동독 내에서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는 동독 내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활성화가 우리의 과제인데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생각해 보며 여성단체들은 어떻

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독 여성NGO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많은 접촉이며 통일을 대비하여 일종의 지원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지원프로그램의 주 역할은 북한 내에 민주적 구조를 건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할 것입니다.

서독의 교육이 동서독 화해·협력에 미친 영향

각 국장(Hans-Jürgen Kaack) (연방내무성)
마레츠키 교수(Maretszki) (베를린 자유대)

가. 각 국장(Hans-Jürgen Kaack)

1) 머리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회동에는 북한 주재 구 동독 대사이셨던 마레츠키 교수님이 동석하여 주셨습니다. 마레츠키 교수님은 동독의 입장에서 당시 통일작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측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의 동독과 서독의 고위층이 같은 자리,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내독성의 해체 문제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관이 내독성 이었습니다. 내독성은 1991년까지만 존재하고 그 뒤에 독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내무성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직후에 내독성을 빠르게 해체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었어도 통일에 관한 작업은 많이 있었고 통일과정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언한다면 한국에서 통일이 되어도 통일에 관련된 기관은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한동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독일 통일의 특징

제가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일이 된 1990년 이후 지속된 어려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동시성과 비동시성, 지속성과 비지속성으로 특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동서독인들 간에 많은 갈등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먼저 동시성과 비동시성이란, 물질적인 통일과 정신적 통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통일의 과정이 물질적인 통일과정, 심리적 융화 및 화합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독일의 통일에서는 그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성과 비지속성이란, 동서독인 들의 통일 이후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5600만 명의 서독인 들에게는 이러한 지속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법체계 하에 똑같은 국가, 국기 밑에서 같은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생은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를 전혀 체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지속성을 말합니다.

반면 비지속성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중단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600만 명의 동독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국기, 새로운 법체계, 새로운 국가, 새 친구 등 이전의 삶의 환경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독정부는 이런 대립 현상을 과소 평가해 왔습니다.

4) 정신적인 통일 문제

전세계적인 이목(독일이 아닌 외국)에서 볼 때 굉장히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독일(동독)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물질적인 회복을 가져왔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선로, 거리, 전화망, 낡은 건물의 수리, 병원, 학교의 건립 등 물질적인 면에서 마무리를 빨리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신적인 통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정신적인 통일을 서독정부는 과소평가 했습니다. 서독정부는 당시 금전적, 재정적 지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돈이면 머리를 살 수 있다는 비판받을 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나. 마레츠키 교수(Maretski)

1) 머리말

동독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독의 헌법은 굉장히 관용적이기 때문에 동독인은 그 헌법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는데, 다시 말해 이 헌법으로 인해 처벌 같은 것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동독사람의 경우 완전히 우파인 사람도 있었고 완전히 좌파인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현재도 굉장히 과거에 사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만큼 다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일에 관한 얘기고 다른 하나는 6월에 있을 남북한 정상회담에 관한 것입니다.

2) 독일 통일 방식

민족통일이란 독립된 두 체계 중에서 한 체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단일체계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체제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통일은 혼합이나 융화는 안되고 하나의 체제가 지속되고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양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체제가 양존 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 국가, 두 정부의 형식으로 양존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남북한 정상회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정상회담에 앞서 1972년에 체결했던 남북한 공동성명을 현실화하고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국가로서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문화적 단위로서 서로 만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북간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 한 가지 개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라는 개념인데 화해는 공존이 아니며 화해와 공존은 구별해야 되는데 이는 공존은 법적인 용어로서 법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화해라는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독간에 화해에 관한 조항은 없었고 그래도 화해는 가능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수많은 첩보활동을 하면서도 정상화 과정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냉정하고 실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화해라는 최대 목표를 앞에 두지 말고 정상화라는 최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질의 및 응답

Q) 화해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동서독과 한국과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데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동서독은 분단은 되었지만 싸운 적이 없고 남북간은 크게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화해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A)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사실로 인해 화해가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Q)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폭넓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정상이 만나서 잘해보자는 그런 화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사이의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차원에서 화해를 말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화해를 해도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A) 아까 전쟁을 말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인데 북한의 태도가 미국하고만 평화협정을 맺고 남한과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만 용서의 작업(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해의 개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화해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라는 개념은 인간대 인간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정부간의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화해한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 정부가 서로간에 접근하고 대화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Q)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레츠키 교수님이 화해를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최소 목표로 중점을 두라는 말을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화해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한 갈통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는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

는 상태이고 적극적 평화는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화해라는 개념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소극적 화해인 것 같고, 마레츠키 교수님이 말하는 화해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적극적 화해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정부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전쟁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그런 것에 대해 말씀 드리기 보다는 72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루어 졌던 독일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제도적인 통합은 빨리 이루어 져서 성공적이었는데 의식이나 정신적 통합은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 해주었는데 그것을 연방정부나 독일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해결하였습니까?

A) 몇몇 중요 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중요기관에서 정신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은 정부의 지원 아래 초정파적인 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재단으로서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당의 지시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데나워 재단은 기민당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 에버트 재단은 사민당 소속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관심 있는 동독인이 정치적 교육을 받고 정치,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언급하고 싶은데, 통일연구원에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탈주자에 대해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비공식

적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독일의 경우 애국정신의 부활은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역사적 사실로 인해 애국정신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애국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일 당시의 현상을 설명하면 서독인은 자신을 서독인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럽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차원에서 통일 이 아니라 동독의 유럽으로의 통합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별로 유익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로서는 유럽, 나토로의 동독통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Q) 70년대 초 동방정책에 대해 동독인 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또한 동독은 통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자본주의 체제에 흡수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정상화에 따른 개방으로 인해 체제의 위협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정상화 →→→ 개방 →→→ 체제의 위협) 그러나 구동독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72년에서 89년 사이의 서독정부의 커다란 성과라 볼 수 있는 것은 동독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독당원들도 통일 시에 서독 측은 동독을 공평하게 대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Q) 그런데 한 체제가 소멸되고 한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마레츠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고위공무원으로서 동독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자각은 언제 하였습니까?

A) 어려운 질문입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체제가 내 연금이 나올 때까지만 지속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체제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원의 경우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이 붕괴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모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동독 내에서는 진지하게 국방의 의무(방어의 자세)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은 서독이 무력침공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혁명(개혁)을 일으켰던 야당뿐만 아니라 동독 자체를 방어했어야 할 위치나 기능을 가졌던 사람들도 진지하게 방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역사가 흐르는 대로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Q) 각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독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동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흡수통일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A)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독일정치의 목적은 국경간의 친숙성을 목적으로 동서독간의 인도적 차원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89년 여름에 국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내무성 근무 당시 정치재단에서 여러 발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비교를 했는데, 즉 당시 동독인은 파란색 여권, 서독인은 초록색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치의 목적은 이런 여권의 차별 없이 같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주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자로서 적극적인 접근을 추구하면 그것은 언제나 강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당시 동서독간의 여행의 자유를 통해 장벽에 구멍이 뚫린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독에게 불리하지는 않은 반면 오히려 동독 체제에게는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강자로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면 결국은 강자가 남게 됩니다.

Q) 한국에선 북한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면 북한이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1970년대 중반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그 때 동

서독의 관계는 미국의 수교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A) 독일의 경우 먼저 동서독간의 교류가 있는 다음 동독과 미국의 수교가 있었습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본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

알브레흐트 교수(Ulrich Albrecht)

(베를린 자유대)

본인은 우선 남북관계 및 현재(주: 2000.5) 눈앞에 둔 정상회담에 대해 독일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동독의 커다란 차이는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북한과 달리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았어도 동, 서독은 점차 접근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바로 전에 커다란 의문점으로 남아 있던 것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동독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그래도 동독이 소련의 최신무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동독의 고위급 군인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배신이 아닐까 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가 세력(북한의 경우는 중국)은 국내 정치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자주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2+4」와 같은 방식의 주변세력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는 남·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차원의 협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합의문에 수록되기 이전에 4개 세력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부시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동·서독에게 물

어 보기도 전에 많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르바초프와 부시 대통령은 독일 군사력의 크기를 사실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군사력을 37만 명으로 제한했고 그것은 당시 서독 군인 숫자 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미국과 소련은 원자력 폐쇄에 관한 문제를 비밀리에 미리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동·서독 정부는 이에 대해 의아한 입장을 취했는데 왜냐하면 원자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가법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 세력들은 그것을 재확인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통일된 독일에서 외국인 군사력 주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협상까지도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아니면 남북한 연합형식의 제도가 이루어 질 경우 미국 군인이 북한지역에 주둔 못하게 하는 조약이 있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간에 신뢰도를 높이고 협동과 투명성을 장려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독주민의 경우에 우편교환이라든가 방문이 가능해진 것은 직접적인 완화정책의 결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민당에서는 그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동독과 북한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는 동독에서는 비교적 제3국을 통한 탈출이 가능했다는 것과 텔레비전을 통해 서방세계의 정보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동서독 통일과 비교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일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대유럽 진출의지가 틀림없다는 것인데 저 자신도 북한 사람으로부터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평화연구소 소장(북한 외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내용은 햇볕정책이 얼마나 투명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질문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적인가 아니면 현 대통령과 관련해

그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은 동독의 마지막 상황(최후의 상황)이었던 반면 북한 정책의 평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정도 유럽에서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질의 응답>

Q) 독일의 통일을 포함, 역사적으로 3가지 형태의 통일을 경험했습니다. 베트남이 전쟁에 의해, 예멘이 합의에 의해,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루어 졌습니다. 말씀 중에 한국은 동서독과 비교는 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독일 통일이 아니라면 베트남이나 예멘 식의 통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통일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베트남식의 통일은 굉장히 싫어하는 통일로 그것은 당시 유혈통일이고, 재정적으로 많은 고갈 상태를 가지고 온 통일입니다. 한국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일은 매우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남북한은 대화나(반드시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협상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서독에서 많은 통일 방식이 있을 거라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빨리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연방형식으로 통일을 하기 원했고 당시에 두 정부가 그대로 지속되는 연방형식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독 헌법에도 제시되어 있는 흡수합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국수상도 당시 연방형태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동독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서 동독이 서독에 뒤지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수상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연방통일제안을 1991년 초에 국제 외교관계에서 언급하면 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와 협동으로 외부세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외무성장관인 겐셔장관은 모든 유럽국가의 참가 하에 통일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OSSE 기관 하에 통일을 인권주의적 입장과 자치주의적 입장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유럽연합과의 대화에 크게 반대했는데 동서독간의 대화는 추진하나 최소한 6개 국가의 참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각 국 외무성에서는 자신의 계획이나 방식이 어떤 점에서 불리하고 유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Q) 남북간의 문제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경협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는 남북경협을 남북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win-win” 거래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경제난으로 허덕이던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물자를 군사분야에 전용하여 군사력 증강을 기도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독의 경우에는 대동독 경협 추진 시에 이러한 우려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서독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A)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이전에도 동서독간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소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서독정부는 동독에게 여러 양보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방정책 추진 이후에는 동서독경협이 본격화되었으며, 서독은 수출입 균형에 관계없이 양보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지속하였으며 동독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경협, 나아가 차관도입을 통해 외환과 필요물자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이 이들 중 일부분을 군사분야, 특히 화학무기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통일 이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 이전 동독은 공식적으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으나, 비밀리에 적어도 화학무기 개발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동독이 약 500g의 현대적인 화학무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화학무기 개발 및 제조시설의 건설에 서독과의 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환을 동독이 일부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동독인민군 내에서는 화학무기가 지역특성상 국가방위에 적합치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당정치국이 화학무기가 이른바 “약소국의 핵무기”라는 논리를 내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독이 동서독 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물자를 화학무기 개발과 같이 군사분야에 대부분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의 결정은 당정치국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와 물자를 판단하여 그때그때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일관되게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동독은 소련의 유가 상승조치와 자국내 갈탄의 고갈 등으로 심각한 에너지를 겪었으며, 그 해소방안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서독의 지멘스사로부터 원자력발전기 2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동독은 서독에게 차관을 요청하였으나 동독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동독은 대서독 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환을 여기에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은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물품을 단기적으로 구입하는데 외환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같은 과일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국경일 등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독 내에서도 동독이 동서독 경협으로 획득한 외환과 물자를 군사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 이후 분석해 본 결과 동독은 이들 중 일부를 군사분야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보다는 당국이 더 긴급하다고 판단한 다른 분야에 뺏길하는 식으로 사용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Q) 그 문제와 관련하여(대동독 지원과 관련) 서독 내부에서 논쟁이 심화된 적은 없었습니까?

A) 대동독정책은 당시 기민당(보수세력)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소단체에 불과 했습니다. 서독정부가 당시 대동독정책이 비밀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을 기독교 단체를 통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정책에 대해서 지도층만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당 사이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법에 의해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간의 신뢰를 통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동독의 10억 마르크의 차입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논란 자체가 그만큼 당시의 경험의 그 단계에까지 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될 때 당시 보수세력이던 기민당 쪽에서의 반대는 어느 정도였고, 일반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대여론을 브란트 정부는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A) 물론 여러 가지 반대의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동구권에서 이주해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독을 탈주한 사람이 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국내 여론상으로 볼 때 그것은 권력다툼의 형태로 몰고 갔는데 이는 어떤 정당이 정부를 대표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것은 1973 - 4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기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동서독간의 계약서가 위헌이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에 기민당의 입장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기민당 내에도 아직 거기에 반대하는 소수세력은 있었습니다. 기민당의 정치지도층은 나중에 사민당의 대동독정책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입니다. 당시 기민당은 대동독정책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간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기민당은 정부 여당이 되면서 대동독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란트 수상은 매년 발행되는 국내보고서에서 대동독정책으로 인해 인권차원에서 동독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는가를 깨닫고 그 당시부터(70년대부터) 독일 연구에 대한 연구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야당이나 일반시민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 햇볕정책이 동방정책과 많이 비교·연구되고 있는데 햇볕정책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한국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서독에서도 정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서독에서는 더 이상 동독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독에서도 반서독정책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 1982년도에 동독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서독인들만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내 여권이 영국에 있는 독일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서 동독사람들이 나를 영국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 사태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SS 20 미사일에 대비해 미국이 퍼싱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동독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는데 1975년 헬싱키 조약에 명시된 인권, 경협, 군사축소 등의 의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에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대화의 주요 내용이 되었습니다. 동독은 1975년 이후로 굳건한 자세를 취했는데 헬싱키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동독 국내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동독은 서독측에서 헬싱키조약을 구실로 동독의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1983년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으로 다시 냉전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1987년도에 미사일 협상을 맺으면서 냉전분위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게 여러 가지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에서 탈주하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대중매체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서독정부의 동독정부에 대한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동·서독이 NATO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서독이 동독을 지지한 선택도 양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독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이라크 전쟁시 동독은 무기판매로 수익을 얻었는데 무기판매로 인해 전쟁국가로 규정되었음에도 당시 서독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는 일종의 정치적 협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가 독일 통일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남북은 정상회담의 의제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독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양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경우 북한은 과거 동독정부보다 더욱 완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북한은 지금 남한의 언론매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은 서독의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평가해 주십시오.

A) 정상회담의 의의는 일반적인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서독간의 외교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 와 닿은 것이 아니었지만 정상회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독 수상인 브란트가 에르푸르트에 갔을 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독 정부는 오시는 손님을 예의 있게 맞아주기를 기대했지만 넘쳐나는 환영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동독 수상이 카슬을 방문했을 때는 전혀 갈채가 없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특이했던 것은 동독 참가자들이 서독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서독 정부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동독사람이 서독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과 많이 괴리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의견, 인식의 차이, 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의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서독에서는 임금투쟁에 관한 데모가 많이 있었는데, 동독에서는 이것이 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에 가까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독 정부측에서는 서독정부에게 왜 동독의 이미지를 대중매체를 통해 향상시키지 않는가 라는 불만은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를 동독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제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하기 보다 서로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대방에 대한 사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결정의 투명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정상회담의 주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언론통제 질문과 관련하여 물론 동독에서도 서독의 TV 시청을 못하게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독에서는 군인, 당원, 공무원들은 서독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서독 친구들의 방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TV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동독은 NATO의 3국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동독에서 시청될 수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TV 시청을 위해 안테나의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데 청소년 단체들이 동독에서 서독 TV 시청을 위해 안테나를 돌리는 것을 거리를 다니면서 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단체에 대해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활동도 중단되었고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는 전파의 전송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동독정부가 서독정부에게 양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통일 당시 여성의 참여나 평화혁명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언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동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통제되어 있어 우편으로 위험한 문서들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정보전달의 역할을 했는데 그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를 계기로 정치적 불신이 희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한국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자우어 국장(Johannes Sauer)

(연방교육연구성)

독일의 경우는 직업교육 자체보다는 직업훈련과 재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한국의 경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에 관한 재교육훈련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 부분이 통일 후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교육훈련의 비용 낭비가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통일이 되면서 통일과정의 양 진영의 국민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훈련은 직업과 생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업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직업훈련은 50년대 말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6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의 체제를 보면 처음에는 동서독이 같은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원적 교육훈련방식(dual system)입니다. 이러한 같은 체계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 독일의 직업환경이 바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체제는 같아도 직업의 형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 독일간의 상이한 직업의 형성은 양 독일의 경제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인데, 즉 독일의 이원적 교육훈련방식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체제는 서독과 다른 교육

훈련방식이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과제 자체는 장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25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큰 기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독일간에는 각각의 형편에 맞는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는데, 동독에서는 직업자체에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활동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 독일간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도 직업훈련의 중심지는 고용된 사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내의 직업훈련체계화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학교과정에 좀 더 많은 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은 90년대 초 통일이 된 후에 사고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회사 내에서 배우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 독일간의 통일전 교류·협력을 보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교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 독일간의 연결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부분에 있어서 동독의 사범연구는 서독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과 서독에서 나타난 커다란 차이점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신축성의 문제였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전문직업교육을 받고 난 후에도 이원적 교육 방식에 따라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고등교육기관(대학교)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가능하지만 동독에서와 같이 발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독의 전문학교는 20만 명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써 서독과는 다르게 사업장이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소유의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고용인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휴가

를 내도록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이후에 동독의 체제를 지속할 수 없었는데 이는 동독의 계획경제에 따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독에서 또 다른 차이점은 직업훈련을 고졸과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서독에서 현재 예전의 동독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범케이스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전 동독의 직업훈련체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배경은 동독이 서독의 법체계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일이 되면서 주 법의 유효화가 동독에도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도기 동안에만 유효했던 조항도 있지만 통일 이후 기본적으로 서독의 교육법은 동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방교육청에서 이전 동독에서 행해졌던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당시 그 체계 하에서 얻었던 경험을 재평가하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면에 대해 몇 가지 말하자면 이전 동독에서는 교육부외에도 직업훈련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중앙기관도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해체되어 기관 측면에서 서독의 제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원적 교육방식에 의한 사업장 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직업연구소가 담당하는 것이며 그 연방청은 작년에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물론 상세한 면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차이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경제체제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90년대부터 서독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구 동독시민의 자격증을 서독에서 인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숫자를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700억 마르크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포함된 것은 교육비 자체 외에도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한 생활

비 조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92년도에는 백만 명의 서민이 완전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되지 않고 전일 교육을 받는 상태임. 당시 노동인구는 800만 명이었음)

90년대에 믿었던 것은 양 독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재교육조치를 취하면 동독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양 국민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어려움은 양 독일 국민 모두 동일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경제는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서독간이 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독에 대한 재교육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순수 지식 자체의 흡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융화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행동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이나 경험의 축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에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시도해야 할 것은 재교육일 경우 사업장과 같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고용인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할 있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0년대 우리는 동독의 재교육 체제를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재교육은 연합기업에 의해 중앙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연합기업은 통일이 되면서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이러한 재교육을 사업장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에서 보면, 저희 자체가 더 배워야 하는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며, 또한 경험을 통한 배움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직업훈련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Q) 서독은 이원적 직업교육시스템이었는데 동독은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A) 동독에서도 이원적 교육시스템이었는데 차이점은 60년대에 와서 경제체제에 따라 교육의 방법은 같아도 직업의 형태가 바뀐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의 형성, 종류에 따른 발전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해야 할 것은 2차 대전 이후 교육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60년대 들어서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독간의 직업의 종류나 형태의 차이는 엄격히 말해 30년 동안만 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통일 이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인적·재정적 지원의 규모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있습니까?

A)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고 학술적인 접촉(연구자료)자료만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는데 자료실의 경우(특히 동독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료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학술교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89년 90년대에 동서독의 직업을 비교하는 보고서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독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구할 수 있을 것인데, 통일을 담당했던 내독성(지금은 없어졌음)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통일 이후 서독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만약 지금 통일 이전의 상태라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A) 서민의 재훈련은 사업장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는 변화된 경제체제인 경우에 사업장에서만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고용인들에게 재훈련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쟁력 상실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배운 것은 사회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실제 경제 속에서의 배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최첨단 사업일 경우 사업장내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시장경제 대 계획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취업을 해서 배우는 사람보다 배워 오는 사람을 더 원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원적 교육방식의 핵심으로써 훈련을 받는 견습생이 이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차이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직업훈련 자체와 재훈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적 교육방식을 한국에서 도입하라는 말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 시장경제 내에서의 사업장은 계속 가동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독 내에 있는 사업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독의 생산성이 떨어진 사업장에서는 고용인들의 재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훈련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직업훈련의 경우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체제를 융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서 서독의 법이 그대로 동독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Q) 서민의 교육만을 말했는데 전문가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까?

A)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단번에 전인구를 교육시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여 교육을 할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동독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독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서 그것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 차원의 문화부장관은 어떤 학력이 인정되고 안 되는가에 대해 많은 결정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어떤 학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이루어져 행정절차만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동독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인정 하기는 했는데, 동독에서 취득했던 학력이 서독에서는 어떤 학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Q) 여기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까?

A) 통일규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 문화부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학력이나 경력 인정의 주관은 주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A) 그렇지는 않고 주마다 문화를 담당하는 장관들의 합의하에 하나의 평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말씀하셨는데 간과될 수 있었던 것이 용접에 관한 자격증입니다. 만약 동독에서 용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자격을 서독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통일 후에 용접을 해서는 안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Q) 동독주민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독인들이 항의

를 했을 텐데 서독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A) 총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주 차원에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서 주마다 융통성 있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Q) 통일 후 자격을 인정하는데 일관성이 없었던 같은데, 용접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것을 취득하려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까?

A) 운전면허증이나 용접 자격증과 같은 그냥 인정되었는데,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서독의 졸업증에 해당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Q)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 의과 대학을 다시 다녀야 했습니까?

A) 고학력(대학졸업)일 경우는 극소수 분야만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되었는데, 극소수 분야란 군 지식이나 안보적 문제 등을 말합니다. 기본 원칙은 학력인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분야는 상이한 교육체계의 차이였는데, 동독의 전문학교는 서독의 전문학교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의 학술적 분야와 전문분야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단지 중간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화해·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멥겔 교수(H. J. Mengel) (베를린 자유대)
프리스니츠 전 차관(Water Priesnitz) (전 내독성)

Q) 동서독의 경우 내독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A) 이중과세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서독간 상업을 행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이 소재 하는 독일의 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Q) 양 독일간에도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쟁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는가? 특별히 분쟁해결만을 위한 의정서나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는가? 또한 구서독은 내독간의 분쟁을 일반국제분쟁과 달리 취급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A) 인적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양 독일의 정부간의 협상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 베를린에 설치된 상주대표부는 양 독일 주민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약간의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서독은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주대표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Q) 동서독간의 상사분쟁은 주로 조정이나 중재 등 재판에 의하지 않는 비사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는가? 재판에 의해 해결된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가? 동서독간의 상사분쟁 해결과정에 나타난 주요특징으로는 어떠한 것을 들 수 있는가?

A) 양 독일간에 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적인 합의가 있는 후에는, 기업들이 그 실행을 위한 협상파트너가 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시장경제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서독의 사기업들은 구동독의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야 했다. 왜냐하면 구동독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지 공기업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분단 직후부터 “지역간 상거래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이 있었으며, 이 협정은 분단 기간 동안 계속 실시되었다. 이 협정은 계속 새로이 협상·갱신되었다. 그리고 내독간 교역이나 거래에 따른 분쟁은 국제상거래법 및 관행에 따라 해결되었다.

Q) 서독주민이 동독지역 체류 중 부당한 인신구속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A) 서독의 시민이 동독에서 국내법 위반으로 체포 또는 억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동독의 관점에서 볼 때 -서독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지만- 정치적 사안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Mengel은 베를린시민으로서 유럽의회에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동베를린으로 여행하는 중 중간에서 하차를 요구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억류된 후 결국 풀려 났는데, 그 해결은 양 독일의 정부차원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거나 상주대표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 서독 시민의 서독정부에 대한 신고(협조요청)와 제3자의 개입으로 해결되었다.

Q) 동서독을 왕래하는 자들이 상대방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처벌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귀환 후 상대측 방문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경우, 범인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수사공조가 동서독간에 실시된 적이 있는가?

A) 범죄의 처리에 관련하여 양 독일의 상호협력은 대단히 잘 이루어졌다. 독일에는 범죄지관할 외에도 체포지관할이 있었다. 한 범죄자가 서독에서 체포되었으면 통상 서독에서 재판을 받았다. 만일 동독이 개별사례에서 범죄자를 인도 받고자 하였다면, 서독이 이를 동독에 인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범죄인이 범죄를 범하고 자기 측 지역으로 무사히 돌아간 일은 거의 없었으며, 현장에서 대부분 체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인도가 실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Q) 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는 동독을 방문여행 체류하는 자들에 대해 영사보호기능을 수행하였는가? 동서독 양측간의 분쟁해결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가?

A)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의 상주대표부는 동독에서 구금된 서독시민을 잘 돌보아주었다. 교도소로 직접 찾아가 이들 시민을 면회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동독시민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권리를 동베를린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게 인정하지 않았다.

Q) 동서독간에는 저작권 보호,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보호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A)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웠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사람

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탈주자에 대하여는 동독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서독 법원이 여기에서 결정해야 했다.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서독에서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 결정이었다.

Q) 동서독간에 우편·통신에 의한 접촉과 교류를 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가? 그에 따른 특별한 법적 제약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또 관련 법규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A) 양 독일간에는 우편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편물교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서독이 국가로서 소포우송 기타의 방법의 형태로 동독에 인도적 원조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원조를 행하려는 단체,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 소포 등을 통해 동독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경우 서독은 세금경감 또는 국가적 지원을 하였다.

Q) 각 주가 동독측과 교류를 할 경우 연방과의 협의 등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또한 국회의 승인 등 절차상의 제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A) 서독은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한 연방의 주가 동독과 접촉한다고 하여도 이에 연방이나 다른 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서독의 이익에 반하는 규정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연하다. 정치범 석방 거래를 위해 동독에 지원을 하는 경우 인권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동독지원을 위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Q) 우리 나라가 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동서독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어떠한 것을 들 수 있겠는가?

A) 서독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법률적인 정비나 계획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이후 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내독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였다. 통일되기 직전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법적인 장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통일되기 직전까지 내독성 등 서독정부는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듭 하였다. 통일과정에서는 오히려 비공식적인 단체와 NGO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 독일의 법통합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민족법의 관점에서 법통합을 접근해야 했었다. 그러나 서독은 일방적으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주민들에게 강요하였다. 이는 양 독일 주민들간의 심리적 갈등, 특히 동독주민의 반발을 가져 온 주된 원인이었다(이와 관련, Mengel은 국가연합 구성안을 기초하는 등 동서독이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법통합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함).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본 NGOs의 역할

쇼어렘어 목사(Friedrich Schorlemmer)

(작센 안할트주 기독교연합회)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유사점은 독일과 한국이 분단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물론 서독과 한국의 비교에서 한국에서는 전쟁을 경험했으며, 동서독간에는 한국보다는 더 가까운 교류가 있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양 국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선전이 독일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반면 한국이나 월남은 굉장히 강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과 독일은 비교할 만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 독일의 비교 가능한 점은 공산주의체제(동독과 북한)하에서 이뤄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집단이 개인을 삼키는 방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군사·안보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체제 자체는 내부적으로 비어가고 경제몰락을 가져오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 모두 동등하다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잘못된 사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독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은 한국과 달리 1949년 이후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독재자가 나온 적이 없고 학생을 총살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분단이 독일의 경우 외부 압박을 받고 이루어 졌지만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진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외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외부

의 요구에 따른 압박이 독일보다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년 평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군인, 주민들이 외쳤던 것은 첫 번째가 자유를 향한 염원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화적인 혁명은 소수 시민권 운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 소수 시민권자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중도 이 평화혁명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중은 소수 평화주의자를 반대하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통일 된 이후에 ‘나는 원래부터 자유를 원했고 체제에 반대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풍부하다’는 말이 성공적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많지 않는 것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독사람들은 지금 통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내에 동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서독인들의 인식은 동독인들에 대해 같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독이 1990년대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것은 모두 옳다. 그래서 서독에 있는 모든 것은 좋고 동독에 있는 모든 것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40년 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그대로 동독에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갔는데 서독 사람 100명중 80%는 삼류계급이며 20%만이 일·이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동독에서는 일류 인력이 서독으로 넘어간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불균형을 가져왔는데 말하자면 콤플렉스를 말하는 것으로 서독 사람은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하고 동독사람은 아무 것도 못하는 패배자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동독사람들은 서독에게 많은 도움을 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독에서는 동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도움이 없이 동독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동독 체제는 완전히 몰락했을 것입니다.

동독의 가장 큰 잘못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빨리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독이 동독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경제적인 불균형에 따라 정치적인 불균형도 동반되었던 것으로 민주주의란 반년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40년 공산주의체제하에서 달라진 정서적 측면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호적인 체제에 있었던 사람들(서독 사람들이) 동독도 같이 속해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은 통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서독 사람들은 더 이상 동독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일이란 자기 검토의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는 동독을 자기에게 포함시키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곳의 시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신학교는 기독교회의 성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토론되고 대화, 의견이 나뉘어 지며 의견, 지식형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정당정치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독의 기독교 신학교들은 대부분 좌파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천주교 단체는 좀더 우파적이며(기민당 쪽), 기독교(프로테스탄트)는 사민당 쪽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며 많은 동서독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현재 세미나를 준비중인데 주제는 ‘동·서독인이 기대하는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또한 10월에 ‘언어의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같은 독일말을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홀에서 보실 수 있지만 어느 화가의 전시 작품이 있는데 ‘마타야’ 라는 화가는 전시회에서 “국가적인 예술도 아니다”라는 서독의 비판을 받

왔는데 그러한 비판은 양 독일간의 식민주의, 차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 볼프’라는 유명한 서독작가는 1989년 이전까지 동서독에서 많은 인정과 호평을 받았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에서는 이 작가를 목살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동독은 몰락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체제보다는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제하에서 겪은 경험을 완전히 제로화 해서는 안되며, 이 사람들을 새로운 체제에 융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은 독재체제하에서 자란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야 했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독인이든 동독인이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이는 남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일부는 민주체제, 일부는 독재체제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서독인이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독재체제하에서 95%가 거기에 복종했던 이유를 설명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라는 것을 듣게 되면 자기의 인식이 일깨워 질 수 있습니다.

Q)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 NGO가 화해와 협력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듣고 싶고 분단 50년만에 남북의 정상회담이 만나게 되는데 1970년대 동서독의 정상회담 이후 NGO의 역할 중 좋은 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교회는 분단 당시 중요한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이는 동독체제하에서 동독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작가들처럼 언어를 통해 계급투쟁의 적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상호 적대감의 고조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대감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국제적인 사고를 가진 기관이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기구로써 동서독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이는 분단 당시 동서독을 이어주는 가장 큰 고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남북한간에 많은 연결을 하라는 것이며 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희생이 될 수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는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잡힌 사람들은 말 뜻 그대로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은 인식해야 하며, 당원들도 사실은 노예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예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 자본주의는 미국의 식민지라 상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과제는 억압받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사람 모두 자유를 찾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이후에 알게된 것은 동독사람은 서독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공산주의)을 반대하는데 사실 공산주의면 어떻습니까? 반공산주의는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반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없어도 살아남습니다. 서독의 일부 유명인사들은 굉장히 반공산주의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당시는 좌파였다가 사회주의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폭발하고 마치 15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하의 감옥에서 수감되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곤 합니다.

누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의 통일을 열망한다는 것이며 비인간적인 국경이 없기를 바라고, 통일이 되는 즉시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반공산주의를 버리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은 반공산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할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반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열렬한 반공산주의자는 진실을 가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됨으로 정확한 관찰을 못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질문과 응답을 못하고 공산주의의 비인도적인 실체를 판단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반기독교적, 반서방적인 것 등 무엇이든지 열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시야를 좁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에 관해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북한, 특히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은 국민을 자유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당원)도 통일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한에서도 자기 검토 또는 자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항상 옳다는 인식이 아닌 역사적으로 남한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왜 RAF 라는 테러 단체가 있었는가, 모택동 사상에 취해있던 사람이 왜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 개방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회담에 비공식적 단체를(NGO) 많이 참가시켜서 편견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도 통일된 이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통일되는 즉시 반공산주의감정, 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남한사회에서는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반공 교육에서 평화교육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독일에서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교회의 힘은 미약한데 남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A) 먼저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논리적, 객관적인 비판이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반공산주의는 옳지 않지만 공산주의의 유혹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점은 우리에게 닥쳐 올 위험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마르크스를 읽으면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한국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날을 잘 예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점은 이런 정보들은 국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상품의 제작 개념이 팔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생산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바보로 만들어 필요 없어도 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를 독일어로 말하면 가치하락이라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에 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북한 교회의 상태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부차원에서 남한에 있는 어떤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를 북한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북한 단체의 교류를 통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 와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동독보다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라디오나 TV를 통한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한 것 중에서 동독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과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부정적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커피를 받고 싶은데 커피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움

을 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착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분단 시 서독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서독간의 접촉 시에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분단 당시 서독인으로서 동독을 방문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동독 사람들은 모든 서독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적, 금전적인 지원은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나 방식으로 주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분단이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일상생활로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얘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어떤 옷가게가 좋은가, 어떤 배우가 더 섹시한가 등)

89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과장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로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며 대립했던 두 체제가 통일된 이후에는 증권시장은 올라갔느냐 등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만약 자본주의가 외부(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지루함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려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진스키라는 사람(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방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티테인먼트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 섹스, 적당히 먹을 것을 제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공산주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저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서독교회 단체에서 동독교회 단체로의 재정지원이 있었습니까?

A) 첫 번째는 동독 예산의 40%가 서독교회의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

었습니다. 외화가 들어오는 것을 동독정부에서는 인정했는데 이 서독교회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병원과 교회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서독재정지원에 관해 말하면 동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서독의 목사들로부터 형제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연간 400마르크(서독 마르크, 환율 5:1)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서독 마르크를 가지고 서방물품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는 동독 돈 20마르크였는데, 서독 마르크를 가지고 국제시장에 가면 4마르크에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동독 쪽에 NGO 가 있었습니까?

A) 교회단체 외에는 NGO가 없었습니다. 서방세계에 대해 NGO라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독재정치 하에서 비정부민간단체는 없었습니다.

Q) 앞서 답변과 연계하여 남한의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관련단체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물론 어렵지만 남한의 NGO들은 북한 정부에서 걸으로 내세우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산하 기관에 대해서라도 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에서 조심할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단체라 하더라도 공산주의체제에서는 대부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 평가

프리스니츠 박사(Dr. Walter Priesnitz)

(전 내독성 차관)

85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분단된 한국과 독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은 남한의 사람들이 당시 서독사람들처럼 통일을 굉장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 볼 때 한국과 독일의 친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 독일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해서도 잠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2차 대전 말기에 분단 되었는데, 당시 연합국들은 모겐쇼우 플랜(Morgenthau-plan) 하에 독일을 완전히 다르게 분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분단은 동서독 분단이 아니라 남북의 분단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의하면 독일의 산업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순수 농경국가로 남겨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처칠 덕분에 이런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는데 처칠은 소련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알타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가 겪은 분단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처음에 3개 지역으로 나뉘었다가 프랑스가 추가되면서 4개 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분단이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런 분단이 굳어진 것은 1949년 동서독이 다른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단이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50

년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1959년 동독은 서독정부에게 통일 제의를 해왔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아데나워가 분단정책을 실시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나토나 서방세계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면 서독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동독은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동구권 나라에 속하게 되고 서독은 나토에 속하게 되어 서방세계에 편입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들이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삶에 관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서방세계로 탈주를 해 왔습니다. 1945년부터 이러한 탈주현상이 시작되었는데 1945년~1949년 사이에 약 80~1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련지역에서 서방진영으로 탈주를 해 왔습니다.

1949년 동독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경지대는 소련군의 통제감시를 받게 되어 탈주가 많이 어렵게 되었는데 베를린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을 통해 탈주가 가능했고 나도 1952년 베를린을 통해 탈주를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급해야 할 사실은 동서독간의 다리는 남북한 처럼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서독간에 활발한 무역교류가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편이 마찰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도 동서독간에 서로로 가능했습니다. 단지 예외지역으로 드레스덴 주변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TV 시청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무지의 지역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베를린을 통해 350만 명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왔고 이로 인해 장벽이 세워지며 탈주가 어려워졌습니다. 단지 노인들만 여행이 가능했고 독일 내에서의 무역교류도 가능했으며 우편도 계속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동독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호네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양독일 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통일로 가

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독 국민들은 동독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독의 탈주민들은 서독 시민과 같은 독일인으로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단지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동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국가로 되는가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호네커는 항상 국가승인을 주장하는 한편, 1980년에 동독시민권의 인정, 본과 베를린에 상설대표부가 아닌 대사관의 설치, 동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서독 자료실의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는 몰랐지만 뒤돌아 볼 때 호네커의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초반부터 동독의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동독은 1970년에 20억 마르크 80년에 300억 마르크, 90년에 500억 마르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확인되었지만 당시 동독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는 엉터리였습니다. 서독의 비밀첩보국(BND)은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정보국에서 수집한 정보는 동독에서 탈주한 굉장히 고위급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급 경제인사였다가 동독에서 탈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동독 경제에 대해 질문할 경우 동독의 GNP는 서독의 50%에 달한다고 응답했는데 나는 몇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독성의 비서실장으로서 나는 동독측에서 정치범을 석방시키는 동독 변호사의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는데 만날 때는 풀려날 사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주임무는 첩보원의 교환이라든가 정치범을 풀려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만 3천명의 정치범을 풀려나게 했고 이산가족을 만나게 했는데 그 때도 재정적 송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35억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쿨 수상이 동독 GNP가 서독의 50%라는 것을 믿느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 많아야 30%

정도라 답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5%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억 마르크에 달하는 스트라우스 주지사의 차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10억 마르크의 차관 제공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을 확대하였고, 서독인들의 동독 관광 시 서독 마르크를 동독 마르크로 1대1로 환산하라는 동독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경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라우스 주지사는 인도적 차원의 이득을 얻으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불이득으로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독과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다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985년 동서독간에 문화체육협정을 맺을 수 있었는데 이는 1989년에 일어난 변혁들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1980년부터 동독 사람들 사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은 외부세력의 변화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건 당시의 무기증강 계획이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같은 것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화, 통일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염원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호네커의 자기도취에 대해 잠시 언급했지만 호네커는 이런 자기도취 때문에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87년 본을 방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콜 수상이 호네커를 국민 대우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호네커의 방문은 그의 양보를 전제로 했는데 이 양보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들도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여행을 했습니다. 해마다 노인 100만 명과 노동연령 100만 명을 합쳐 약 20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87, 88, 89년을 합쳐 5~6백만 명이 서독을 방문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한 가족 당 한 명은 서독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독사람들은 TV를 통해 서독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는 있었지만 몸소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서독을 방문한 사람이 나중에 동독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더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프라하나 헝가리, 바르샤바로 탈주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은 젊은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미래의 생활개선을 위해 탈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내에서 자유를 외치는 동독사람들의 절규이었습니다.

서독의 경우 경제적으로 호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사람들은 재정지원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통일비용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될 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통일 이전에 서독사람에게 그것을 내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실수 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통일 당시 전 동구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세력이 독일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만 해도 88년 말에 독일의 통일은 차후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1989년 6월 고르바초프는 독일을 방문하여 콜과 산책을 할 때 콜은 독일의 통일을 지금 원한다고 말했으나 고르바초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990년 초에 콜 수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드레스덴 사건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콜 수상이 모스크바에서 귀국하면서 “독일 통일은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통일독일과 동구권의 국경선과 통일독일의 나토의 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계속 이주해 갔고, 이러한 현상 자

체가 고르바초프를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6월에 나토문제는 독일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서독의 우호세력이었는데 당시 부시는 콜 수상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달랐습니다. 영국사람들은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유럽 중앙의 인적, 경제적 자원의 분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틀 내에서의 독일 통일은 모든 주변국가들이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생각할 때 당시의 독일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동서독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 판문점이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에 분단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째로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할 수도 있으나 북한은 남한에 있어 하나의 개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북한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만들면 거기에 고용된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월급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고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이 시점에서 북한을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득과 불이득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현재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이 반발할 위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남한에서 지원하는 경우, 항상 북한 주민에게 이런 지원이 남한에서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일본은 분명히 통일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동의를 얻기가 쉬운 상황

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서방에 개방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라 정부자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0~15년 전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 가져야 하고 이득과 불이득을 잘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며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말씀하신 가운데 양면성 즉, 대동독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해결과 동독의 체제안정에 동시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동서독의 경제협력에서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 동독의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어 서독에서 정책적 전환이나 조정이 있었습니까?

A) 본인의 이야기는 1989년 동독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현재 북한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차관을 제공할 경우 그것이 군사력 증강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독도 당시 현금제공은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35억 마르크의 지원은 현금으로 보내졌던 것은 아니고 상품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항상 재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동독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에 동독은 원하는 것을 서독에게 요청했고 서독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오면서 점점 서독은 어느 것은 보내고 어느 것은 보내지 않겠다는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는 바나나 같은 것을 많이 보내 사람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대동독 지원에 대해 서독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그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까?

A) 서독 주민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가예산 또는 주 예산에는 항상 동독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89년에 예산을 책정해 두었는데 90년에 통일이 되면서 인도적 차원의 비용 5억 마르크를(89년 책정예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금액을 병원 건립에 사용했습니다.

Q) 한국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빈곤층에서의 반대가 심한 상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데 서독 국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대동독 지원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또 한국이 상호주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까?

A) 61년 이후에 정치범 외에 이산가족 상봉 수가 50만 명이 될 정도이었기 때문에 서독 국민이 동독 지원에 호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독주민 1/4의 고향이 동독이었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해 언급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독에서는 동독으로 소포를 보낼 때 세금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독에 있는 가족이 쉽게 동독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독의 빈곤층이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지적하였던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복지를 받아야 하는 25%가 동독에서 탈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Q) 한국에서도 체육 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려 하는데 동독과의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하신다면 ?

또한 동서독 정상회담에 앞서 호네커의 성격, 대화, 형식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A) 두 번째 질문과 관련,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취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외교는 심리이며 정상회담에서는 고수준의 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국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질문과 관련, 동서독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차이를 보면 정상회담을 원한 것이 남한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제안해야 하는데 제 느낌으로 볼 때 북한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되지 않은 지원은 오히려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잘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화교류와 관련 체육분야에서 교류가 있었으나, 그것은 국제행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이었습니다. 동서독간의 친선경기를 동독정부가 많이 거부했기 때문에 서독은 문화협정에 체육교류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맺을 수 있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정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고 있더라도 그것을 문서화,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통일에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Q) 정상회담의 과정에 관한 동서독 정부의 공식문서들이 해제가 되어 일반 국민들이 열람 할 수 있습니까?

A) 서독의 문서는 볼 수 있지만 동독에서는 30년 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동독 자료는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시 사 점

- ◇ 손기용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홍용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허문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 ◇ 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본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이 주는 시사점

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독의 대동독 경험과 지원을 통해 동독이 획득할 수 있는 외환과 물자를 동독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서독의 대동독 경험 및 지원정책의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서독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것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외환과 물자를 북한이 군사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의 절박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군사분야에 투입할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동독의 경우에도 경험의 획득물 중 일부를 군사분야 - 예를 들어 화학무기 개발 - 에 투입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른 분야에 투입하였다. 이를 비추어볼 때 군사적 요구가 북한에서 크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북한의 지도부가 경험의 획득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을 주창하고, 군을 중심으로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북한이 군사분야에 경험 획득물을 투입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시에는 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가능한 한 현금제공보다는 물자제공을 우선함으로써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다.

둘째, 남북한에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송금과 결제기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협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교역수익의 군사적 전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셋째, 현금제공 시에는 그것이 일반경제에 투입되고 군사분야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안전조치를 최대한 확보한다.

넷째, 차관 등의 형식으로 대규모의 현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상호주의입장에서 우리의 경제외적 이해관계 - 예를 들어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 사안 - 도 관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현물제공 시에는 품목과 수량에 관해 북한과 협상하며, 이 경우 경협과 정치적 관계의 진전과 병행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

여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서독교회가 행한 거래형태를 참고하여 물자지원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결국 남북경협이 북한군사력의 증강, 경제난의 해소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상을 고려한 바탕 위에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경협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며, 중기적으로는 남북 연계성을 높여 남북이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공동번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신뢰감을 확대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이질감의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이 체제비교를 통해 남한사회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 독일통일과정상 비정부기구(NGOs) 역할의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시사점

김 규 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번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독일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됨으로써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통일이전부터 목사로 봉직하면서 조용하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쇼어렘어 목사와의 면담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국가로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세를 전국민이 납부하는 등 독일인의 일상생활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독에서도 공산주의화된 이후에도 교회는 기본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에서 종교말살정책에 의하여 기독교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는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동독지역의 교회와 서독지역의 교회는 분단이전에 가지고 있던 연계성을 분단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바, 재정적 형편이 나은 서독지역의 교회들이 동독지역의 교회를 물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한편 서독지역의 교회는 물질적 지원과 함께 동독지역의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간접적이거나 시장경제의 장점을 교육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후속조치들로 인하여 관계개선을 향한 발걸음이 매우 바쁜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

한 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사실상 남한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간 관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며, 남북한 종교교류 및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확대는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당국은 남한 종교계의 방북 및 북한 종교인의 남한 초청을 정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 종교계를 포함한 비정부기구들은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남한 내에서의 모금활동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남북관계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북한주민들을 일대일로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지역의 NGOs들도 사실상 199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21세기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므로, 비록 북한지역의 NGOs가 정부의 조종을 받는 유명무실한 단체라 하더라도 공식적 연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NGOs의 세계대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NGOs가 참가할 수 있도록 남한지역의 NGOs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GOs가 시민과 국가간 문제 또는 여러 이익집단간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지역에 자생적 NGOs가 설립될 때까지 남한지역의 NGOs가 북한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남한지역의 NGOs는 학계,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대북한 지원선도는 남

한과 북한간 관계개선 및 화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NGOs간 연계가 확대되면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간 연대감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삶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독과 서독간 관계에서는 교회가 양측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계 인사들간의 교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는 오래된 사찰들이 많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이들을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북한 지역 사찰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북한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간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을 통한 위로부터의 남북 관계개선 노력을 따라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남한의 NGOs가 아래로부터의 남북 관계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한걸 가벼워지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보·외교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시사점

여 인 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Q)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 브란트 동방정책에 대한 동독측의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

A) 동독은 기본적으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불신했다.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와 공존 가능성을 의심했고 관계 정상화로 동독이 개방되면 체제 위협이 있을 것으로 불안해했다. 따라서 동독은 국가승인과 동독 시민권의 인정을 요구했고 상주대표부가 아닌 대사관 설치를 주장했으며 잘츠기터(Salzgitter) 소재 인권침해 자료수집소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통일시에는 동독 국민들 및 당 간부들 사이에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브란트 동방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Q) 70년대 중반 미국과 동독의 외교관계 수립이 동서독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 ?

A) 동서독간에 교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동독과 미국의 수교도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은 서독의 동맹국가로서 동서독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미·소간의 긴장완화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등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면 동독과 미국의 수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동서독 관계도 크게 진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대미 관

계에서 경제이득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험에서 이득이 없다. 따라서 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이 경제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Q) 통일이전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A) 60-70년대에 서독내 몇 개 도시들은 동독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동독은 도시간 자매결연의 전제조건으로 동독 주민들의 독자적인 국적 인정, 양독 의회의 공식적인 접촉, 잘츠기터(Salzgitter) 소재 인권침해 자료수집소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의 태도는 1985년 11월 자르란트(Saarland) 주지사 라폰탱과 호네커 서기장의 회동으로 변화되어 최초로 서독 Saarlouis 시와 동독 Eisenhuettenstadt 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양독간 자매결연 배경은 1985년 가을 서독과 소련간에 2개 도시의 자매결연이 합의된 이후 소련측의 권고로 동독이 수락했기 때문이다. 1989년 9월까지 62개 도시간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매결연 사업으로 교회의 활동과 역할을 추가하는 문제, 협상대표단의 숫자 문제, 청소년 교류의 방법 문제 등이 자매결연 추진상의 어려운 점들이었다.

Q) 통일이전 동독 당국이 서독의 방송전파를 방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A) 동독은 주민들의 서독 TV 시청을 방해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공식적으로 동독의 군인, 당원, 공무원은 서독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독 거주 친지들의 방문도 받지 못하였다. 동독 주민들 TV의 안테나 방향을 청소년 단체들이 감시했고 당국은 방해 전파를 보냈으며 주민들을 교육시켰다.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는 등 동독당국의 조치에 성과가 없자 나중에는 방해전파 송신을

중단 하였는 바, 이는 동독의 서독에 대한 양보이었다고 할 수 있다.

Q)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 공산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

A) 70년대 서독 공산당의 목표는 고작 시의회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1977년 4명의 공산당원이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

-Westfalen)주의 아헨(Aachen) 시의회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못했고 단지 동독공산당(SED)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SED의 몰락이후 이들의 세계관도 함께 몰락했다. 당시 서독 공산당은 여당, 야당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오늘날 녹색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대북포용정책을 위한 국내정치 여건조성 방안에 관한 시사점

홍 용 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50여 년간 통일 및 대북정책은 언제나 국내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논쟁을 피할 수 없었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으며, 통일 및 대북정책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추진되어왔다. 비록 내부적으로 정부정책(주로 보수적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정부에 의해 억압되곤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하며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대북 포용정책이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 및 일반국민들 사이에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여론의 추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첫째,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진보세력(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했던)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던데 반하여, 현재는 정부가 비교적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세력(비교적 힘이 강한 기득

1) 1999년 10월에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여론선도층은 포용정책을 지지(71.2%)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포용정책을 찬성(51.5%)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48.5%)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7-80% 수준으로 올라갔으나, 이러한 지지율은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권 세력)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둘째,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는 바, 경제적 지원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직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은 대북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한·독 워크샵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독일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첫째, 서독 정부의 동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느 정도였는가? 둘째, 대동독 경제지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셋째, 동방정책에 대한 비판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독일측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는 한국에 비해 서독에서는 내부적 합의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1970년대 사민당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기민당이 초기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단순 비판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적 비판도 하였다. 아울러 1973년에 기민당의 개혁파로 동방정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던 헬무트 콜이 기민당의 당수로 선출됨으로써 동방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82년 기민당은 재집권 후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지속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소수단체에 불과하였다.

동방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차가 적었던 만큼 대다수 국민들도 동방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서독 국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 프리스니츠(Walter Priesnitz) 박사는 서독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의 25% 정도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빈곤층들도 정부의 대동독 지원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서독의 시민단체들도 대동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특히 교회는 분단 상황에서 동서독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중간 역할 수행하였다.²⁾

서독에서 동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는 정부의 노력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트 정부는 매년 정부보고서를 통해 동방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효과를 상세하게 밝혔으며, 동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동독연구에 대한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공산주의의 세력 확대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 활동은 보장하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독의 국내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당시 서독인들이 동서독간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였을 뿐, 동독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험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들의 목소리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여론에 대해서도 협상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초당외교를 주장하며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 여·야의 구별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국론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야가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후 이를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도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증가되는 만큼 우리 사회 내부의

2) 이는 동독에서도 교회는 공산주의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이 IMF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북한에게 줄 돈이 있으면, 우리부터 도와달라’ 항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서독의 수준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갖추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자신들이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관심을 보여야 그들도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반공교육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경직된 반공의식은 대북포용정책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반공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독출신의 한 목사는 반공주의는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없어져도 반공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반공주의는 통일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계속 존재하여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 조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

허 문 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독일이 통일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번 한·독 워크숍은 통일독일 현장의 열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구 동·서독 출신의 학자 및 관리들로부터 현황과 문제점, 해소방안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통일의 첫 단계로 나가기 시작한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을 통해 이상적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 서독관리와 구 동독지역 현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게 된 몇 가지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프리스니츠 구서독 내독성 차관은 오늘의 남·북한이 과거의 동·서독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3가지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남한에서부터 통일 염원 또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한 일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나,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과 토지에 결합하여 생산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한반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는 주변국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았다. 그 대신 특별히 유의해야 할 나라로서 중국과 일본을 제시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프리스니츠는 통일에 대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환경을 남한이 잘 조성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성급하게 기대하거나, 우리 민족 단독의 힘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견해가 아님을 반성할 수 있었다. 우리가 평화통일과 수준 높은 통일국가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내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노력과 외적으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구 동독 출신의 일트겐(Iltgen) 현 작센주 의장은 서독이 비록 흡수통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급속한 통일(89.10 ~ 90.10)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음을 지적한 후, 오늘의 통일 진전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평가하였다. 정치적 부문은 80% 이상의 구동독 주민들이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상당 정도 통일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부문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일직후 구 동독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생했으며, 실업률이 현재 18 ~ 20% 수준에 달하며(통일 직후에는 40%),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구 동독지역 지원비가 1조 5000억 마르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노동자 임금격차 평준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평등화 또는 경제적 통일을 이루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국민 내부통합문제인 사회적 통일은 경제적 통일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물질적 문제인 경제적 통일보다 머리와 감정의 문제인 사회적 통일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며,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구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차이(difference)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통합의 기본 또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일트겐 의장과 의 대화에서는 우리의 통일방식이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단계적 통일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 방식으로는 정치적 통일→경제적 통일→사회적 통일 방식보다 사회적 통일→경제적 통일→정치적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에게는 보다 적실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 동독 전자기술자 출신인 와그너 (Herbert Wagner) 드레스덴 시장은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자신의 7가지 명제를 소개하였다. 독일 통일은 모든 독일인이 원했으나, 이렇게 빨리 이뤄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통일이 오기는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전망하는 방식과는 아주 상이하게 다가왔다. 통일이 흥분과 감격 속에 이뤄졌으나, 동시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문제점과 긴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통일은 상호간의 심리적 정서적 이해와 더불어 상대방 과거 역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통일은 또한 막대한 규모의 물질적 재정적 연대감을 요구한다. 통일 이후에는 과거에 존속했던 제도나 기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통일은 많은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양쪽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와그너 시장은 어느 누구도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통일이 이뤄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서 한국민이 배울 점을 찾는다면, 먼저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구 동독에서도 통일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단지 개혁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남북한간에도 다양한 계층간의 공개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그는 과거 동구라파의 개혁 노력들은 소련의 무력개

입(53.6.17 동독 의거, 56 헝가리 의거, 68 체코 의거 등)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1989년 소련이 무력개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통일의 필요조건은 국제적 여건 조성이며, 충분조건은 민족내부적 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이번 워크샵에서 만난 독일 지도층들은 구동독 출신이건, 구서독 출신이건 모두 통일문제의 이중적 성격, 즉 국제적 성격과 민족적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민족화해의 이중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화합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을 거듭 생각하게 되었다.

□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

강 일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 분단이후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 된 이후 직업교육훈련의 환경이 변화되어 상호 직업의 종류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체계는 같아도 서로 다른 직업교육훈련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즉 교육훈련의 방식의 문제보다는 교육훈련 내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동독의 경우는 직업자체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 듯이 남북한 분단 이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혹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독은 통일 이후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독은 통일 후에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제도와 과정을 서독화 하여 통일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통일 이전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서독 정부가 통일이전에 동독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서독정부는 통일 후 동독지역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과정을 서독과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다보니 효과도 없이 오히려 통일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통일 후에서야 통일이전의 동독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이런 경험을 볼 때 우리는 통일전 단계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독일이 통일 전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의 장점을 인정하였듯이,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장점과 단점 및 제도와 과정의 통합 가능성 등을 연구·준비하여 통일 이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혼란과 재정의 낭비 및 통일 후유증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서독은 90년대부터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구 동독시민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통일 전에 서독정부가 동독 주민의 자격에 관한 연구와 그들의 자격에 대한 인정의 범위 등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도 탈북자들의 북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준비의 부족으로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를 거울삼아 우리도 미리 북한주민의 직업에 관련한 자격과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인정여부 및 재교육훈련여부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주의 국가 주민의 시장경제원리의 이해와 적용은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보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은 학교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탈북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응 교육훈련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원리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방식 등을 스스로 터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노력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나친 관여나 주관은 오히려 역기능을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학력이나 경력의 인정은 주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인정사항이 너무 자세하게 명시함에 따라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정치행정체제는 독일과 다르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도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는 탈북자 문제 등을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업무중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공무원의 양성 및 관련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 동독 탈주자 및 이주자를 위한 시설로 ‘긴급구호소’ 라는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어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시설의 운영과 지원에 지방정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설에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장비 및 인력이 없었다.

우리의 경우 현재 통일부산하의 ‘하나원’ 이라는 탈북자들을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직업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고 단지 사회적응이라는 기본적인 교육만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시설을 더 확대 개편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의 인적인 교류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과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긴급구호소의 운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주자를 각 지방에 분산하여 정착을 유도하였는데, 우리의 경우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역분배 문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의 경우 현재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관심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중앙부처차원에서 관련 부처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적인 체제형성과 의지가 필요하다.

○ 통일전 서독은 정부차원보다 교회 등 민간기구를 통하여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한 점이 시사적이다. 즉 서독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동독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우선 관련 교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교회는 다시 동독의 관련 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등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물론 우리의 경우 독일의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보다는 현재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경험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북한주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은 물론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반적인 환경·체제·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를 답습 혹은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준비는 단순한 기능·기술차원의 준비나 지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통합까지도 고려한 복합적이며 총체적인 방안(정책,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연구의 결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민간부문의 지지와 지원도 중요하다.

□ 여성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시사점

김 재 인(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장 혜 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진은 본 워크샵을 통해 통일 이전 서독의 시각에서 여성교류협력 추진과정 및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자문자인 슈미트 국장이 구동독인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관점에서 통일을 전후한 민간 및 여성교류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워크샵에서 부각되었던 점은 서독과 동독의 민간교류는 단계별로 이루어졌고 특히 서독에서 동독 내 여성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정에서 교회와 도서관의 역할이었다. 또한 초기에는 관광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가족방문으로부터 나중에는 단체들의 방문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되었는데 동독여성들이 서독여성들로부터 원했던 도움들은 각종 정보관련 인쇄물 및 자료 그리고 접촉자체를 통한 토론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접촉을 통한 대화와 만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볼 때 한국의 상황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대화와 만남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접촉방법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에 시사되는 점들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독과 동독여성들의 교류상황에서 자료 구입비 및 세미나 참석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에게는 교류보다 지원의 성격을 띤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여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동시에 북한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필요성이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 및 여성관련 연구소들이 북한의 여성연구관련자들과 자료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여성국제학술회의가 다양한 이슈로 개최되는 것도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상황에서도 동서독 상호 방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동독인들이 서독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큰 수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방문 및 접촉이 중요한바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와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을 이해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그리고 다각도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여성들만의 교류협력 특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서독의 전반적인 동독지원정책과 종교 및 환경단체들의 교류협력의 유형(세미나, 방문 등)은 여성교류협력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남북한 여성비정부기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계적인 시도의 필요성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다음

으로 남북여성들의 공통관심을 찾아 상호접촉 및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들에게 익숙한 부분인 생활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북한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남한여성들이 북한 및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남녀평등관련문제 (평등의식 고양, 여성복지 등)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독의 경우처럼 남한의 환경 및 종교여성단체들과 기타 관련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며 이들 단체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개인적인 교류나 단체방문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북한 내 민주적 구조 확립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프로그램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구심점을 갖고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에 관한 시사점

김 창 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독일 통일 10년 중간 평가

1. 부적응 문제

가. 일반교육

(1) 동독 지역의 교사

동독지역의 교사들은 교육통합과정에 불만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동독 교육제도의 좋은 점은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독의 교육제도를 이식하려고만 했지 동독의 좋은 점을 취사선택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독의 우수한 자연과학 그리고 직업교육과 대학입학을 연계하는 제도 등은 서독에서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독 지역 교사는 자신들을 “열등 교사”(“Lehrer zweiter Klassen”)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서독 지역 교사의 86%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은 새 체제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일 초기 일부 부적응 청소년들이 항의표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나찌 시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 동독에서는 민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가치 혼란의 시대에서 교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성장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교육통합과정의 문제점

통일이 너무 신속히 진행되어 차근차근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독 지역 교사들은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통일 이후 서독 인사들이 동독에서 정복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이 동독인 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통일 후 동독 교사 처리 과정에서 교장, 교감, 교육청 인사 등 대부분의 간부급 교사는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능력 있고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처리했어야 함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사 재교육 역시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별히 자연과학 교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과학 담당 교사는 재교육, 계속교육, 추가적인 학업, 전과교육 등을 받았다. 무엇보다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 직업교육

구 동독 시민의 직업재교육과 시장경제질서에서의 적응 교육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문제였으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적응은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오늘날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시장경제는 단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동독 시민이 서독의 기업체에서 서독 사람들과 일할 때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을 잘하나, 동독의 시민이 동독의 사업장에서 동독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의 재교육은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직업교육을 너무 좁게 생각하였다. 즉, 약간의 교정과 재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 정부는 동독 시민의 적응 교육이 많은 고통과 시간이 수반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연방 정부는 오로지 금전적 지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직업교육과 재교육의 핵심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심리적 장벽이 높아 동베를린 지역 사람들이 서베를린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적응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2.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 문제

가. 내적-심리적 통합 문제

독일 통일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도-물질의 통일과 의식-가치관의 통일의 괴리가 그 첫 번째 문제이다. 물질적 변화(시설, 전화망, 건물보수, 학교, 병원 등), 새로운 제도의 시작은 비교적 빠르고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 즉 새로운 사회체제, 법체계를 적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괴리 문제인데, 서독인 들은 통일 이후 연속적으로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인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바뀌었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것이 요청되었다.

나. 기성세대의 불만

최근 구 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PDS가 구 동독 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40년 동안 동독에서는 실업이 없었으나,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구 동독에 대한 향수의 표현(Ostalgie 현상)이 구 공산당의 지지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독 정부와 국민은 구 동독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가의 실패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의 실패이지 국민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기성세대의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독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독일 역사의 하찮은 한 부분으로 치부하려는 태도, 동독의 역사 역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사회의 역사로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혔다. 그 결과 독일인이라는 Identity 보다는 동독인으로서의 Identity를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통일 문제는 물질적 통일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문제임을 독일 통일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 학생들의 의식

학생들은 통일 초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평균 80%), 이등국민이라는 부모의 의식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극우주의, 외국인 폭력 현상은 아직도 청소년들의 잠

재의식에 남아 있다.

II. 시사점

1. 일반교육

가. 교육통합과정

동서독의 경우 교육통합의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육통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남북한이 시간을 갖고 교육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남북한 교육통합 준비위원회(가칭) 등의 기구를 구성해 교육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교류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 및 교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동서독에서는 통일 전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정치교육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임에 비추어 남한에서의 정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정치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고, 해당 학생들의 성장배경,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평화교육

평화교육은 평화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매개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매개하며, 민주적인 방식의 정치적 참여와 행위로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의 역할은 지대하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키워주고, 통일 후 있게 될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매개하고,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은 통일준비교육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남북한 화해·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시사점

제 성 호
(중앙대 교수)

1. 동서독의 경우 내독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법률적·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양 독일의 정부는 내독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동서독의 선례에서 보듯이 남북한간의 분쟁은 분쟁해결절차가 공식화·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남북한간의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함.

3. 통일을 국가적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가 통일의 기본원리가 되어야 할 것임.

4. 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은 질서정연한 절차를 밟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법통합 및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후유증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임(특히 Mengel교수가 강조한 점)

5.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NGO의 협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법통합의 경우 북한주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법률교육은 정부 혼자서 담당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임.

수집 및 참고자료

<관련자료>

□ 교육분야

Ackermann, P., Politiklehrer-Ausbildung, Bonn, 1978.

Akademie der Pädagogischen Wissen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lgemeinbildung - Lehrplanwerk - Unterricht, Berlin, 1972.

Breit, G., Schiele, S.(Hrsg.), Handlungsorientierung im Politikunterricht, Bonn, 199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198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Urteilsbildung: Aufgabe und Wege für den Politikunterricht, Bonn, 1997.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Ein Handbuch zu Grundlagen und Praxisfeldern, Bonn, 1999.

Geschichte der Freien Deutschen Jugend, Berlin, 1982.

Geulen, D.,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Autobiographische Gruppengespräche mit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Opladen, 1998.

Glatzer, W., Ostner, I.(Hrsg.), Deutschland im Wandel, Opladen, 1999.

Grotzky, J.(Hg.), Freiheit alleine Macht nicht satt: Alltag in den Reformstaaten Osteuropas, München, 1996.

Grünbaum, R., Deutsche Einheit, Berlin, 1999.

Gugel, G., Jäger, U., Gewalt muß nicht sein: Eine Einführung in friedenspädagogisches Denken und Handeln, Tübingen, 1995.

Hardtwig, W., Wunkler, H. A.(Hrsg.), Deutsche Entfremdung: Zum Befinden in Ost und West, München, 1994.

Hofmann, J., Hochschulreform in der DDR, Berlin, 1975.

Honecker, M.,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unserer Schule, Berlin, 1978.

Jaide, W., Hille, B.(Hrsg.), Jugend im doppelten Deutschland, Opladen, 1977.

Judt, M.(Hrsg.), DDR-Geschichte in Dokumenten, Bonn, 1998.

Kuhn, H.-W., u.a.(Hrsg.),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Mallee, R., u.a., Lernziel Frieden: Eine Orientierungshilfe für die schulische und außerschulische Bildungsarbeit, Berlin, 1982.

Mickel, W. W.(Hrsg.), Handbuch zur politischer Bildung, Bonn, 1999.

Mietzner, U., Enteignung der Subjekte - Lehrer und Schule in der DDR, Opladen, 1998.

Niermann, J.,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Schlegel, U., Förster, P.(Hrsg.), Ostdeutsche Jugendliche: Vom DDR-Bürger zum Bundesbürger, Opladen, 1997.

Ulshöfer, R., Götz, Th., Politische Bildung - ein Auftrag aller Fächer, Freiburg, 1975.

Utz, A. F., u.a., Politische Bildung im Umbruch, München, 1976.

Vollbrecht, R.,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stdeutsche Jugendliche nach der Wende und im Westen, Opladen, 1993.

□ 여성분야

Ehrhart Neube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isela Helwig, Hildegard Maria Nickel (Hrsg.)

Frauen in Deutschland 1945-199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erausgegeben von Wolfgang Hardtwig und Heinrich August
Winkler, 1994

Deutsche Entfremdung Aum Gefinden in Ost und est
Verlag C.H. Beck Munchen

Werner Weidenfeld, Karl-Rudolf Korte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Sonderausgabe für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Berlin

□ 직업교육분야

Appel, Reinhard(2000). Einheit, die ich meine. Köln.

Hepp, Gerd u. a.(1994). Die schwierigen. Berlin.

Bergmann, Bärbel u. a.(1996). Kompetenzentwicklung '96.
Berlin.

Köhler, Günter(1991). Notaufnahme. Berlin.

Hardtwig, Wolfgang und H. A. Winkler(1994). Deutsche
Entfremdung. Mün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1999). Wahlen, Berlin.

Münz, Reiner u.a.(1997).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Frankfurt/New York.

Wetzlaugk, Udo(1998), Berliner Blokade und luftbrücke 1948/49,
Berlin.

<독일학자>

Prof. Dr. Hildegard Nickel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Philosophische Fakultät III
Fakultätsinstitut sozialwissenschaften
Unter den Linden 6
100099 Berlin
Fax: 0049-30-20 93 43 40

Prof. Dr. Christiane Lemke
Universität Hannover, Institut für Politikwissenschaft
Schneiderberg 50
30165 Hannover
Fax: 0049-511-762-4199
email: Ch.Lemke@mbox.ipw.uni-hannover.de

Prof. Astrid Albrecht-Heide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 für Erziehungswissenschaften
Franklinstr. 28
10587 Berlin
Fax: 0049-30-31473223

<한·독워크숍 일정표>

- 5월 12일(금): 서울 출발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도착
- 5월 13일(토): 베를린, 현지시찰
10:00~13:00: 동독탈주자 및 이주자를 위한 베를린 마리안펠데 소재 「긴급구조소」 방문
- 5월 14일(일): 휴식
- 5월 15일(월): 베를린, 제1차 워크숍
제1주제(11:30~13:00):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여성NGOs의 역할”
- 자문자: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성 슈미트 국장(Gertraude Schmidt)
제2주제(14:00~16:00): “법적 측면에서 본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
- 자문자: 베를린 자유대학교 멩엘 교수(H. J. Mengel)
제3주제(16:00~18:00):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본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
- 자문자: 베를린 자유대학교 알브레흐트 교수 (Ulrich Albrecht)
- 5월 16일(화): 베를린, 제2차 워크숍
제4주제(09:00~11:00):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에서의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 자문자: 연방교육연구성 자우어 국장(Johannes Sauer)

제5주제(11:00~13:00):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 평가”

- 자문자: 전 연방내무성 차관 프리스니츠 박사(Dr. Walter Priesnitz, 현 BVVG감독위원장)

제6주제(15:00~17:00): “서독의 교육이 동서독 화해·협력에 미친 영향”

- 자문자: 연방내무성 각 국장(Hans Jürgen-Kaack),
베를린 자유대 마레츠키 교수(Maretzki)

■ 5월 17일(수): 비텐베르크, 제3차 워크샵

제7주제(15:30~17:30): “동서독 화해·협력에서 NGOs의 역할”

- 자문자 : 작센 안할트주 기독교연합회 쇼어렘머 목사
(Friedrich Schorlemmer)

■ 5월 18일(목): 드레스덴, 제4차 워크샵

제8주제(14:00~15:30): “통일 이전 동서독 화해·협력의 문제점:
동독의 관점에서 (1)”

- 자문자: 작센 주의회 일트겐 의장(Erich Iltgen)

제9주제(16:00~17:30): “통일 이전 동서독 화해·협력의 문제점:
동독의 관점에서 (2)”

- 자문자: 드레스덴시 와그너 시장(Herbert Wagner)

■ 5월 19-20일(금-토): 드레스덴 출발 - 프랑크푸르트 - 서울 도착